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개선 시급

전남도 125.3km² 미집행 해소엔 13조 필요 건축 행위 제한... 재정난 지자체 민원 양산 민자유치·공원기금 조성 등 해결책 제안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 19억243만 m² 가운데 4억8120만 m²만이 집행되고 14억2122만 m²는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면적만도 9억2188만 m²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장기미집행해 각종 민원을 양산시켜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일몰제로 해제되는 시설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용도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또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는 제도상 한계로 도시공원 추진이 어려워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연구원 양진홍 위원은 일몰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민간자본유치 ▲기부 및 공원기금 조성 ▲환경방식을 활용한 근린공원이나 숲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양 위원은 "지금까지 도시정책기조가 '도시 속의 공원 건설'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원 속의 도시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경우 결정면적 669.7km² 중 미집행 면적이 125.3km²로 현재 17.9%의 미집행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법 제 47조에 의한 매수

청구 대상과 일몰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62.2%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3조3000억원(보상비 4조 9000억원 포함)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목표시는 미집행률이 50.4%로 높은데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81.1%에 달해 향후 일몰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는 심각한 도시문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성환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비 50%이상 국고 보조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는 전면 폐지하고, 집행시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도시계획 조례로 일몰제에 대한 규정을 정

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능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미집행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토지매입비)을 편성토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이 4일 오후 안좌면사무소에서 열린 이통법정에 나와 심리를 받고 있다.

섬마을에 나타난 '삶터법정'

광주지법, 신안 안좌도서 개인파산 사건 15건 재판 양식장 태풍 피해로 빚진 농어민 대상 '법률서비스'

"바다 낚시 어떤가요? 배가 뜰 수 있나요?" 광주지법 파산 48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포항에 전화를 걸어 기상 상황부터 확인했다. 신안군 안좌도를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하기로 된 날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안좌면사무소에서 재판자 집회 6건, 선고 9건 등 15건의 개인 파산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산 신청인 대부분은 태풍으로 양식장 피해를 보거나 특용작물 등 농업에 종사하다가 빚을 지게 된 농어민이었다. 흑산·도초·우이·비금도 등 인근 섬 지역에서 파산을 신청한 이들은 기존에는 광주지법 본원에 출석해야 했던 불편을 판사의 방문으로 덜 수 있었다. '현장 법정'인 만큼 재판에서는 신안군청 행정지원과장의 지역 산업 현황 설명이나 파산 관재인과의 면담도 충실하게 이뤄졌다. 집

로 돌아가는 뱃시간을 고려해 재판 순서를 정하는 배려도 있었다. 광주지법은 다음달부터 도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사건 심리를 당사자가 사는 곳 주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삶터법정'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해남지원에서 시범적으로 첫 시행한 뒤 두 번째로 안좌도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고충법원을 신청한 사건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기로 한 것은 광주지법이 처음이다. 비금도에 사는 김모(69)씨는 "아침 일찍 첫 배로 목포를 거쳐 길도 잘 모르는 광주법원까지 가려니 막막했는데 판사가 찾아와서 편리했다"며 "재판 시간을 맞추기도 쉽고 무엇보다 뱃시간 때문에 광주나 목포에서 하루를 묵는 일도 없어 좋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설대목 인파 재래시장. 입춘(立春)이자 강진군 강진읍 '5일장'인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려는 인파들로 모처럼 시골 재래시장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진군 제공>

유치권 갈등 광양 '우림필유' 입주 시작

중미동 800세대 규모... 법원 "시공사는 입주 방해 말라"

광양시 중미동 우림필유 아파트 시공사와 채권자(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그동안 입주가 미뤄지면서 피해를 입었던 분양자들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법원이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를 방해하자 채권자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공사의 반대로 입주하지 못한 채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보관한 뒤 여관이나 모텔 등에서 기거했던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광양시와 우림필유 분양자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 우림필유 아파트 채권자인 A신택 등이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입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대우산업개발은 우림건설의 부도 이후 지난해 초 시공에 참여해 지난해 9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공 기한을 넘기며 공사비 손실이 예상되자 이 아파트를 불법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의 이삿짐 차량을 막는 등 입주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일부 분양자들의 입주가 단기간으로 허용되기도 했지만 대우산업개발이 유치권을 앞세워 용역업체를 동원한 뒤 아파트 열쇠를 가져가 출입을 통제해 분양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살던 집을 처분한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갈 곳이 없어져야 이삿짐 없이 묵만 입주하는가 하면, 열쇠업자를 불러 아파트 키를 다시 맞추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대우산업개발의 방해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자들은 이삿짐을 컨테이

너에 보관한 채 전·월세를 구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모텔 등에서 지내며 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현재 우림필유는 803세대 가운데 210세대가 잔금을 납부했으며, 73세대가 입주한 가운데 일부 세대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입주가 본격화될 것 같다"면서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해 신택사, 금융기관과 협의해 미비된 마무리 공사를 실행해 입주민의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 분양한 우림필유는 지난해 1월 우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행사가 대우산업개발과 잔여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산업개발측이 지난해 12월 책임준공 약정기일 70일을 넘긴 뒤 광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신생아 출산율 4년 연속 증가

군 출산장려 시책 효과·작년에만 281명 늘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신생아 출산율이 4년 연속 증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조금씩 늘어난 신생아가 지난 2011년 529명에서 2012년에는 810명으로 1년만에 281명의 신생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남군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신생아 증가로 입산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시작

했으며 입산부에게는 임신제와 철분제를 매일 지원해 주고 있다. 출산 가정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12일 간 관해 산후조리와 가사 서비스를 해주고 산모의 모유 수유를 향상을 위해 유축기를 대여 하는 등 출산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는 출산축하품(쇠고기, 미역, 내의 등) 제공과 함께 셋째 이상부터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혜택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해남군은 난임 부부에게 최대 4회까지 시술비와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 앞으로 출산율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등 올해는 더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펼쳐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여수시, 중·고생 322명 장학금 11억 학교 환경개선·시민 평생학습 기반 조성 197억 투자

여수시가 올해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80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11억원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여수시는 중학교 졸업식과 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관내 중·고교 우수학생 322명에게 '중3 우수학생 관내 고 진학장려금'과 '고교 우수인재 장학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3 우수학생 관내 고 진학장려금'은 각 중학교 졸업시기에 맞춰 1인당 3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은 중학교 내신 상위 5% 이내 학생 122명과 여수영재교육학교를 끝까지 수료한 45명 등 총 167명이다. 고교 2,3학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고교 우수인재 장학금'은 일반고는 1인당 200만원, 특성학교는 100만원씩이 지원되며 대상은 학교장이 선발한

전년도 성적 상위 2% 학생 155명이다. 특성학교는 수업료도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최우수학생 격려금'도 각 고교를 통해 지급된다.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거나 예·체능 특기 및 각종 기능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학년말에 지급된다. 인원은 각 학교의 2.5%인 총 2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하면 된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사기 진작을 통해 다양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장학금을 늘렸다"며 "올해는 장학금을 포함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총 1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청희기자 chkim@

비행청소년 멘토 완도경찰

1대1 결연 선도 프로그램 효과

완도경찰이 마련한 비행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완도경찰은 4일 "지난해 취임한 양성진 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직접 비행 청소년들과 1대1 결연을 맺어 조언해주는 '호연지기 프로그램'을 거쳐간 청소년만 53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 서장 등은 최근 1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과 명사 심리와 상산 산책로 70리를 함께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이모(17)군은 "도시 학생들보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 좋았고 경찰 아저씨들과 이겨졌지 대화를 나누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간부들은 이들 학생의 멘토가 돼 성적,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에서부터 이성 문제,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주고 있다. 양성진 서장은 "누구나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청소년기에는 더욱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른다"며 "경찰만 아니라 지역 어른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치면 너그럽게 응시해주는 것이 청소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양성진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 간부들이 멘토를 맺은 학생들과 상산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다.

세월굴

"집단시설물 전력 안정 공급 최선"

김기석 한전 강진지사장



"양식장·축양장·화훼단지 등 집단시설물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관내 취약지구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한국전력 강진지사 김기석(52) 지사장은 "지난해 태풍 불라벤으로 원활한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보성출신인 김지사는 광주 서서고와 전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입사해 광주전남본부 경영지원팀장,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김정희(50)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